신상공개제도 대상자의 제도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보호관찰중인 신상공개 대상자를 중심으로*

강 지 현**

국 | 문 | 요 | 약

신상공개제도와 관련하여 일반 국민의 알권리 보호의 중요성과 이를 통한 성범죄의 예방효과에 대한 논의는 매우 활발한 반면, 제도를 적용받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신상공개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자들의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이로 인한 행동변화 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신상공개 대상자들의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보호관찰 중인 신상공개 성범죄자 3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본 연구에 이용하였다. 조사결과,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들은 신상공개제도를 불공평한 제도로 인식하며 처벌로서의 수치심 유발 및 행위자 비난의 낙인을 찍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대상자들의 부정적인 의견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범죄 전과가 있는 대상자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관계자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거나 폭언을 하는 등 부정적인 경험을 할수록,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주제어 : 신상공개제도, 성폭력 범죄자, 우편고지제도, 신상공개제도 수용태도,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식

* 이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1):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연구”에서 수집된 이차자료를 재분석하여 작성되었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I. 서론

신상공개제도는 전자발찌로 잘 알려진 전자 감시제도와 함께 가장 논의가 활발한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 중 하나이다. 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2000년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시행되었는데, 초기에 이 법률은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이름을 청소년 보호위원회의 인터넷 게시판과 정부중앙청사 및 시·도의 게시판을 통해 게재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효과를 누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지난 10여 년간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몇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공개대상자의 범위 및 선정방식, 공개방식, 공개내용 등에 변화를 거듭해 왔다. 이와 함께, 초기의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억제를 목적으로 하던 법률의 주목적이 현재는 성범죄자에 대한 일반국민의 알권리 보호라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일반 국민의 알권리 보호의 중요성과 이를 통한 성범죄의 예방효과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활발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신상공개 제도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자들의 제도에 대한 인식 및 이해에 대한 논의와 실증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특히, 기존의 신상공개제도 관련 논의들은 관련 법적 쟁점들과잉금지원칙에의 위배 여부 및 평등원칙에의 위배여부, 고지제도의 소급적용의 문제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고, 제도에 대한 인식 및 실증 연구들은 일반인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식 및 이로 인한 행동변화 등에 주목해 왔다. 신상공개 대상이 되고 제도를 적용받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은 범죄자에 대한 연구의 상대적 어려움 및 제도의 변경 및 시행이후 아직 평가연구를 실시할 만한 충분한 데이터의 축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신상공개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들의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또한, 대상자들의 제도에 대한 인식과 이해 없이 동제도의 효과 및 기능을 평가하고 제도의 개선점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신상공개 대상자들의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2000년부터 시행된 신상공개제도는 초기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게시판과 정부중앙청사 및 시·도의 게시판을 통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던 방식에서 2008년에 신상정보 등록 내용을 성명, 연령, 사진, 주소 및 실제 거주지뿐만 아니라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와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형태로 변경되었고, 공개결정기관도 행정기관에서 법원으로 변경되었다. 2010년에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공개방식을 도입하였고, 2011년에는 ‘신상정보 우편고지제도’의 시행으로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을 세대원으로 둔 세대(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뿐만 아니라 2011년부터는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로서까지 공개 대상 범죄자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신상공개제도의 변화는 제도의 시행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한 실증연구의 실시 및 그 결과의 반영이라기보다는 혜진·예슬이 사건과 같은 대중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아동 및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발생과 보다 더 강력한 정책을 요구하는 여론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신상공개제도의 도입 직후에 이루어진 초기의 실증 연구(이영분 외 2002; 이영란, 2005)는 신상공개제도가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조사연구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신상공개제도의 다양한 측면, 특히 제도 대상자의 제도에 대한 인식 및 이해 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신상공개제도 실시 이후에 제도 대상자에 대한 실증연구는 2012년의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전혀 시행된 적이 없고, 신문 등 언론에서 대상자의 제도에 대한 인식 및 공개로 인한 영향 등을 언급하면서 실직과 이혼 등의 가정불화 등을 겪는 사례를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에서는 신상등록 및 공개제도와 관련하여 우리보다 다양한 연구들이 실시되었는데, 일반 시민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인식 등을 조사한 실증연구들이 여러 차례 실시되었다. 이 연구들에 따르면 일반시민들은 신상등록 리스트를 열람하지 않거나 등록 및 공개제도의 내용을 때때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신상등록 제도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derson and Sample, 2008; Kernsmith,

Comartin, Craun and Kernsmith, 2009; Levenson et al., 2007; Lieb and Nunlist, 2008). 그러나, 신상등록제도의 시행역사가 우리보다 길고 제도에 대한 실증연구도 훨씬 많이 실시된 미국에서도 등록 및 공개제도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자들의 제도에 대한 인식 및 제도가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들은 일반 시민대상 연구에 비해 그리 많지 않다. Tewksbury와 Lees(2007)의 연구에 따르면, 범죄자 대부분은 자신이 신상 등록 및 공개제도의 대상자가 되는 것에는 부정적이나 신상등록 및 공개제도의 의의는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상등록 및 공개제도를 인정하더라도, 성범죄자들은 신상등록 및 공개제도의 재범억제 효과는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ercado, Alvarez and Levenson, 2008).

미국에서 진행된 신상등록 및 공개제도 대상자들에 대한 연구에서는 신상 등록 및 공개의 대상이 된 성범죄자들이 고립감,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에서의 문제, 물리적 위협이나 폭행, 실직 등의 문제 등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Mercado, Alvarez and Levenson, 2008; Zevitz and Farkas, 2000; Levenson and Cotte, 2005; Tewksbury, 2005; Tewksbury and Lees, 2006, Mercado, Alvarez and Levenson, 2008; Burchfield and Mingus, 2008). 또한, Zevitz와 Farkas (2000)의 연구에서는 신상공개제도가 대상자와 보호관찰/가석방 담당관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였고, 대부분의 신상공개 대상자가 신상공개제도가 가지는 재범억제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신상공개제도가 신상공개 대상자 및 그 가족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Levenson과 Tewksbury(2009)의 연구에서 자세히 다루었는데, 신상공개 대상자들은 성범죄자라는 사실이 이웃에 공개된 이후에 협박이나 물리적 공격, 집이나 자동차 등에 대한 공격, 이웃 사람들로부터의 이사 강요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 등록 및 공개제도가 성범죄자의 재범억제나 잠재적인 범죄자의 범죄를 억제하는 일반예방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평가연구들도 미국에서 진행되었는데, 이들 연구의 결론은 일관적이지 않다. 2005년에 실시된 워싱턴 주립 공공정책연구소(Washington Stat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2005)의 연구결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신상공개제도가 신상이 공개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억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ewksbury and Jennings, 2010; Schram

and Milloy, 1995; Petrosino and Petrosino, 1999; Adkins, Huff, and Stageberg, 2000; Zevitz, 2006).

신상공개제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자들이 동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제도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특히 저항이론(Sherman, 1993)은 이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저항이론은 범죄의 종류 및 범죄자, 사회적 상황 등에 따라 형사처벌이 범죄를 증가, 혹은 감소시키거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 형사처벌이 가지는 다양하고 비일관적인 효과에 주목하여 형사처벌이 오히려 범죄의 증가를 가져오는 상황에 대해 이론적 설명을 제시하고자 한 이론이다. 기존의 억제(deterrence)와 낙인(labeling)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하던 형벌의 효과 대해 다소 편협했던 이론적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광범위하게 형벌의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 세 가지 이론 - Braithwaite's theory of reintegrative shaming(1989), Tyler's study of compliance (1990), and Scheff & Retzinger's sociology of the master emotions of pride and shame - 을 통합하여 형벌이 범죄를 증가시키는 상황에 대해 이론적 설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Sherman, 1993). 저항이론에서는 형벌에 대한 저항이 나타나는 네 가지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범죄자가 형벌을 불공평(unfair)하다고 정의할 것, (2)범죄자가 형벌을 가하는 기관이나 그 기관이 대표하는 지역사회에의 유대감이 낮거나 그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었다고 느낄 것, (3)범죄자가 형벌을 범법행위가 아닌 그러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낙인찍우거나 거부(reject)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할 것, (4)범죄자가 형벌이 수반하는 수치심이 실제로 자신에게 해가된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거나 부인할 것(Sherman, 1993).

저항이론에 따르면, 형법적 제재는 범죄자가 그 제재를 공정한 것으로 느끼고 그들이 지역사회에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재범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저항이론을 신상공개제도의 대상이 된 성범죄자들에게 적용하여 보면, 범죄자들이 신상공개제도로 인해 수치심이나 고립감을 경험하면서 동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제도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신상공개제도는 범죄로부터의 단절보다는 오히려 지속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실시된 성범죄자들에 대한 선행연구들도 신상공개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

과 오히려 재범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데 신상공개제도의 시행이 성범죄자들에게 고립감 및 좌절감 등을 느끼게 하고 이는 오히려 재범가능성을 부추길 수 있음을 언급하거나(Zevitz and Farkas, 2000), 성범죄자들에 대한 미국사회의 격렬한 감정적 대응이 신상공개제도의 근본이 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뢰 및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Quinn, Forsyth, and Mullen-Quinn, 2004).

Tewksbury의 연구(Tewksbury 2004b; Tewksbury and Lees, 2007)에서는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대상자들의 인식이 재범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상공개제도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살펴보았는데, 신상등록 및 공개에 대한 태도를 수치심, 처벌의 불공평성, 신상등록 및 공개제도의 당위성,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수용 등으로 측정하여 신상등록 및 공개제도에 대한 성범죄자들의 태도를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성범죄자들은 등록 및 공개제도가 주는 수치심의 정도가 매우 높다고 느끼고 있으며 성범죄자 등록·공개제도는 매우 불공평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도가 가진 사회적 바라는 이해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특성이 제도인식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도 살펴보았는데, 피해자의 연령과 숫자(다수 피해자 vs. 1인 피해자 범죄), 거주지역 특성(metropolitan 지역과 그 외 지역)은 제도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등록기간이 평생인 성범죄자는 10년의 등록기간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에 비해 제도에 더욱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Tewksbury(2004b)의 연구 등 몇몇을 제외하고는 미국에서도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대상자의 인식을 살펴보는 연구는 많이 수행되지 않았다.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일반 시민의 제도에 대한 인식 및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신상공개제도의 법률적 쟁점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활발하였고, 제도의 시행과정 및 그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며 제도 대상자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특히, 저항이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형사제재를 불공평하며 범죄자를 낙인찍거나 거부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할 경우 형사처벌이 오히려 범죄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는 점은 제도에 대한 대상자의 수용도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 및 대상자들의 제도인식이 가지는 형사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본 연구에서는 신상공개제도 대상자들의 제도에 대한 인식 및 의견을 살펴보고 이러한 제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올바른 제도 운영 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제도인식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도 제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아, 본 연구는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 제도인식의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탐색적 수준의 연구가 될 것임을 밝혀둔다.

III. 연구방법

1. 자료

이 연구에서는 형사정책연구원에서 2012년에 실시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 관리시스템 평가연구(1):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연구’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2010년 이후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을 받은 대상자 중에서 2012년 9월 현재 보호관찰명령이 집행중인 성폭력 범죄자를 조사모집단으로 활용하였는데, 이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자들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어서 아직 신상이 공개되지 않아 신상공개로 인한 변화 등을 조사하기에 부적절하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만을 선고 받은 성폭력범죄자들은 개별적으로 흩어져 사회생활에 복귀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들을 일일이 찾아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한 것이다. 조사는 전국의 26개 보호관찰소를 선정하여 각 소에서 보호관찰 중인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대상자 전원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설문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 등을 이유로 관찰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한 보호관찰소에 협조를 의뢰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성범죄자의 면담일

정에 맞추어 보호관찰소에서 조사가 실시되었고, 설문지를 이용한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해력이 지나치게 낮거나 알코올·마약 중독 등을 겪고 있는 대상자는 조사대상에서 배제하였다.

국내에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신상공개제도 및 그 영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상공개제도로 인한 영향 및 이에 대한 인식 등을 측정하기 위한 조사항목들은 주로 미국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참조하여 구성하였다. 특히, 미국에서 신상공개제도가 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여러 차례 조사한 바 있는 Levenson박사가 2010년에 개편한 설문지와 최근에 유사한 연구를 수행한 Mercado박사의 설문지를 원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한국실정에 맞게 번역하는 작업을 거쳐서 설문지에 반영하였다. 423명의 보호관찰 중인 신상 등록 및 공개 성범죄자가 설문에 응하였고 이들 중 신상공개 명령 없이 등록만을 하는 등록대상자는 제외하고 신상공개 대상자 343명의 조사결과를 본 연구에 이용하였다.

2. 변인

먼저, 대상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식 및 수용태도를 (1)내가 이미 충분히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나의 신상정보를 오랜 기간동안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2)나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3)나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나를 낙인찍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각각의 항목들은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도에 대한 불공평성, 수치심, 그리고 행위자 비난의 낙인으로 측정하는 것은 저항이론에서 밝힌 형사제재에 대한 저항을 가져올 수 있는 네 가지 조건들 가운데 범죄자의 지역사회에 낮은 유대감 항목을 제외하고 범죄자가 자신에게 가해진 형사제재 및 그 영향에 대한 느낌과 행위자 비난 등을 측정하는 세 가지 항목을 반영하여 구성되었다. 다만, 처벌의 수치심을 측정하는 항목의 경우에는 저항이론의 조건에서는 범죄자가 형사처벌이 수반하는 수치심이 실제로 자신에게 해가된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거나 부인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신상공개제도가 매우 수치스러운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는 항목에 대한 의견으로 측정하여, 저항이론의 조건과 차이가 있다¹⁾.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 변인들은 Tewksbury(2004b)의 연구에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과 조운오(2010)의 연구에서 사용한 처벌의 주관적 고통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반영하여 구성하였으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대상자의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이 부족하여 탐색적 수준의 가설검증을 시도하였다. Tewksbury(2004b)의 연구에서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평생인 대상자가 등록기간이 10년인 대상자에 비해 제도에 더욱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고려하여 신상공개 종류 등 공개명령과 관련한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활용하였고, 조운오(2010)의 연구에서 처벌의 주관적 고통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나타난 학력, 재판의 불공정성 등을 반영하여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수사재판과정에서의 경험을 독립변수에 포함하였다.

종합하여 살펴보면, 본 연구의 독립변인들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포함한 대상자 관련 변수로 성별, 연령, 결혼 여부, 교육 수준, 직장 유무, 범죄경력과 성범죄 치료프로그램의

1) 이에 대해서, 저항이론에서는 수치심을 많이 갖는 경우가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부정적인 것이라는 것을 가정한다는 의미이므로 수치스러운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는 항목을 역코딩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심사의견이 있었다. 연구자는 이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고민한 끝에 역코딩하지 않고 수치스러운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는 항목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상 문항을 역코딩하더라도 저항이론의 명제와 같은 의미로 해석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저항이론에서는 범죄자가 본인이 받는 형사제재가 유발하는 수치심이 본인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부인할 것을 저항의 네 가지 조건 중에 하나로 제시하면서 수치심이 해가 된다는 것을 부인하는 충분조건(sufficient conditions)으로 ①무력감에 우선한 분노(indignation chosen over impotence)와 ②형사제재를 가하는 기관에 대한 약점/모순의 인식(perceived weakness/ambivalence of sanctioning agents)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서는 이처럼 다양하고 자세한 항목이 측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항목을 역코딩할 경우, 해당항목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다양해 질 수 있는데 이에겐 제도의 수용여부와 상관없는 대상자의 감정적 수치심에 대한 의견과 처벌이 가져오는 수치심 및 그 효과를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를 함께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신상공개제도 대상자들의 제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살펴 보면서 저항이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차용하고 있으나, 동 이론을 검증하는 것에 연구목적은 두기보다는 신상공개제도 대상자들의 제도인식을 탐색적으로 살펴보는 데 그 연구목적이 있다는 점과 종속변수에 차용된 다른 항목들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역코딩하지 않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강 여부 등이 그것이다. 두 번째는 신상공개 명령과 관련한 변수들로, 성범죄의 종류(강간과 강제추행), 신상공개의 종류(인터넷 공개와 우편고지) 등을 포함하며, 마지막으로 대상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고려하여 공개이후의 따돌림이나 협박 등의 부정적 경험 유무, 신상등록 및 공개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경험 등을 포함하였다.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대상자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가 제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에서 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알고 있는지를 질문하여 인지도를 측정하였는데, 다음의 여섯 항목을 질문하였다: (1)이사 등으로 인해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자는 3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등록대상자는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등록대상자로 결정이 난 후 관계기관은 등록대상자에게 ‘신상등록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4)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넘긴 경우, 수사를 받을 수 있다 (5)신상에 관한 거짓정보를 제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6)제출한 신상정보는 10년간(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경우 20년간) 보존된다.

대상자의 수사 재판과정중의 경험이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선행연구에서 대상자가 재판을 불공정하다고 느낄수록 처벌을 고통스럽게 느낀다(조운오, 2010)는 점을 반영하여 대상자의 수사재판 과정중의 경험을 부정적 경험과 방어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먼저 부정적 경험은 수사재판 과정 중 관계자들이 (1)나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2) 하지도 않은 범죄까지 덮어 씌우려 했다 (3)나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사용했다 세 항목으로 측정하였고, 방어권 보장은 수사재판과정에서 관계자들이 (1)내게 말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다 (2)나의 방어권(변호사 선임권, 묵비권)을 보호해 주었다 두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각 항목들은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그런 편이다 ⑤매우 그렇다 ⑥잘 모르겠다로 측정되었고 잘 모르겠다는 제외하고 요인 분석²⁾을 실시하여 사용하였다.

2) 수사·재판과정에서의 부정적 경험은 Eigenvalue=1.763, 58.77%의 variance 설명력, 신뢰도 계수=.648, 방어권 보장은 Eigenvalue=1.421, 71.06%의 variance 설명력, 신뢰도 계수=.593.

신상공개로 인한 동네에서의 부정적 경험은 신상공개자라는 이유로 동네사람들에게 헐박이나 불평 등을 들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집주인이나 동네사람들에게 이사를 권유 혹은 강요받은 것이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IV. 분석 결과

1. 기술 통계

먼저 아래 표에서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를 나타내었다. 조사대상자는 전 원 남성이었고, 평균 연령은 39세였다. 결혼상태와 관련해서는 약 52%가 미혼이었으며, 25%가 기혼 및 동거, 23%는 이혼이나 별거, 사별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약 43%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고, 26%는 대학재학 이상, 17%는 중학교 졸업, 12%는 초등학교 졸업, 그리고 2.6%는 학교를 전혀 다닌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8.2%가 조사 당시 직업이 있다고 답하였다.

신상공개 이유가 된 범죄의 종류에 따른 구분으로는 77.6%가 강간 및 준강간, 22.4%가 강제추행으로 나타났다. 절반이 약간 넘는 54.2%가 인터넷 공개 대상자였으며, 45.8%는 인터넷 공개와 함께 우편고지 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신상등록 대상자는 제외하고 공개 대상자만을 포함하였는데, 이는 공개 없이 신상정보를 관계기관에 등록만 하는 등록대상자의 제도에 대한 인식과 공개 대상자의 제도에의 인식 차이가 클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대상자의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수사재판 과정중의 부정적 경험, 그리고 신상공개로 인한 동네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을 포함하였는데,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지도 변수의 평균은 4.73이고, 표준편차는 1.70이었다. 신상공개대상인 성범죄자라는 이유로 응답자의 23.7%가 동네에서 헐박이나 불평 등을 들은 경험이 있고, 7.4%는 이사를 권유 혹은 강요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기술통계

변수		%
성별	남성	100
연령	평균=39.15, SD=13.85	
결혼 상태	미혼	52.3
	기혼 및 동거	24.6
	이혼, 별거, 사별	23.1
교육수준	무학	2.6
	초등학교 졸업 (중퇴 포함)	12.0
	중학교 졸업 (중퇴 포함)	16.8
	고등학교 졸업 (중퇴 포함)	42.9
	대학 재학 이상	25.7
직장 유무	직장 있음	78.4
	직장 없음	21.6
성범죄 종류	강간 및 준강간 (미수 포함)	77.6
	강제추행	22.4
신상공개 종류	인터넷 공개	54.2
	인터넷 공개와 우편고지	45.8
성범죄 전과유무	있음	21.2
	없음	78.8
성범죄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대상 여부	수강명령 대상	86.3
	수강명령 대상 아님	13.7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지도	신상정보등록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인지 여부, 6개 항목에 대한 인지도로 측정 평균= 4.73, SD=1.70, 범위=0-6	
공개이후의 협박 및 불평 경험	신상공개자라는 이유로 동네사람들에게 협박, 불평등을 들었다	23.7
공개이후의 이사 강요 경험	신상공개자라는 이유로 집주인이나 동네사람들의 이사 권유 및 강요가 있었다	7.4

2. 신상공개제도 대상자의 제도에 대한 인식

신상공개 제도 대상자의 제도에 대한 인식을 먼저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대상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식

(단위: 명(%))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SD)
내가 이미 충분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29 (8.7)	77 (23.0)	129 (38.5)	100 (29.9)	2.90 (.93)
나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나에게 매우 수치스러운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21 (6.3)	35 (10.4)	130 (38.8)	149 (44.5)	3.21 (.87)
나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나를 낙인찍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28 (8.4)	57 (17.0)	137 (40.9)	113 (33.7)	3.00 (.92)

이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그런 편이다(129명, 38.5%)와 매우 그렇다(100명, 29.9%)는 응답이 많았다. 신상공개를 수치스러운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그런 편이다(149명, 44.5%)와 매우 그렇다(149명, 44.5%)는 응답이 많았으며, 신상공개제도는 대상자를 낙인찍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그런 편이다(137명, 40.9%)와 매우 그렇다(113명, 33.7%)는 응답이 많았다. 이처럼 대상자들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은 신상공개제도가 대상자에게 주는 부담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이다. 다음에서는 대상자의 제도에 대한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살펴보겠다.

3.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신상공개 제도 대상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알아보기 위해 대상자의 부정적 제도인식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대상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대상자가 제도를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지, 처벌을 수치스럽게 느끼는지, 그리고 신상공개제도가 대상자를 낙인찍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등 저항이론과 선행연구들을 고려하여 구성된 세 문항들로 구성하였고 분석을 위해 세 항목들을 요인분석³⁾한 결과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대상자 관련 변수 중에서는 결혼 상태만이 유의미한 변수였는데, 이혼이나 사별, 별거 상태인 대상자는 미혼인 대상자에 비해서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나 직장유무, 연령 등은 대상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범죄 전과가 있는 대상자가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더 부정적인 인식을 높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범죄의 종류와 신상공개명령의 종류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동네에서의 부정적 경험 또한 신상공개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 대상자의 부정적 제도 인식에 미치는 영향

Variables		
	Beta	t
연령	-.105	-1.230
교육수준	.093	1.262
직장 유무	-.003	-.050
결혼 상태 - 기혼 및 동거	.100	1.317
결혼 상태 - 이혼, 별거, 사별	.170	2.399**
신상공개 종류 (우편고지)	.101	1.609
성범죄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대상	-.041	-.654
성범죄 종류 (강제추행)	-.019	-.306
성범죄 전과 있음	.112	1.828*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지도	-.018	-.281
공개이후의 협박 및 불평 경험	.057	.845
공개이후의 이사 강요	.014	.210
수사재판과정에서의 부정적 경험	.357	5.750***
수사재판과정에서의 방어권 보장	-.002	-.032
F	3,976***	
Adjusted R ²	.153	

*p<0.10, **p<0.05, ***p<0.01

3) Eigenvalue=2.264, 75.45%의 variance 설명력, 신뢰도 계수=.836

대상자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겪는 부정적 경험은 신상공개제도의 인식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사 재판과정에서 관계자들로부터 부정적인 경험을 하였다고 인식할수록 신상공개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방어권 보장 여부는 제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지도 또한 제도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IV. 결론 및 함의

앞서 우리는 신상공개제도의 대상인 성범죄자들이 가지는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혼 및 별거, 사별한 대상자는 미혼 대상자에 비해 신상공개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였고, 성범죄 전과가 있는 대상자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관계자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거나 폭언을 하는 등 부정적인 경험을 할수록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상공개제도의 성공을 위한 제도 대상자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시사한다. 특히, 2012년 11월 22일에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에서는 공개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안이 통과되었는데, 현재의 읍·면·동까지만 공개하던 것을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확대하여 제시하고,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여부를 함께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범죄자의 전과사실을 그 죄명과 횟수로 기재하도록 하였고, 기존에 부처에 따라 달리 적용되었던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에 판결일자 및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상공개제도 대상자를 소급적용하여 2008년 4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사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벌금형을 제외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개정안에 포함하였다 (김지선, 강지현, 김정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이러한 최근의 신상공개제도와 관련한 개정법률은 연이어 발생한 성폭력 사건으

로 성폭력범죄자의 관리에 대한 관심과 함께 신상공개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이 지적되는데 따른 결과인데, 이로 인해 보다 강력한 성범죄자 관리 및 이를 통한 성범죄 감소를 의도한 결과이다. 개정된 법률의 내용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대상자에 대한 공개정보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성범죄자들의 제도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었고, 소급적용 규정은 대상자의 범위 또한 확대하였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논의 및 연구는 제도의 법률적 쟁점과 제도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고, 제도 대상자들의 제도 인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현 시점에서 비록 탐색적 수준에서 실시된 것이기는 하지만 본 연구는 몇 가지 함의를 지닌다.

첫째, 신상공개제도 대상자들의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적인 견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동 제도를 자신들을 낙인찍기 위한 것이나 매우 수치스러운 처벌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미국이나 영국의 연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고, 개인의 이름과 주소, 사진 등 신상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한다는 신상공개제도의 특성상 피하기 힘든 결과이다. 그러나, 미국 등에서 진행된 선행연구와 한 가지 다른 특성은,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제도에 대한 수용도가 높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의 분석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으나, 조사 데이터 내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수용도를 측정하는 문항들(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내 스스로 성충동을 통제할 수 없으므로 신상공개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조심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이 있어 이 문항들에 대한 응답을 확인하였다. 확인 결과, 해당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이 2.05와 1.79로 각각 나타나, 표2에서 나타난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제도에 대한 수용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상공개제도 대상자들이 제도에 대해 불만이 있으나 왜 사회가 신상공개제도를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다는 Tewksbury and Lees(2007)의 연구결과와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제도에 대한 수용도가 낮으면서 동시에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우리의 연구결과는 이러한 대상자들의 부정적 인식 및 수용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둘째,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대상자의 인적 특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기도는 수사재판과정에서의 경험 및 대상자의 수사재판과정에 대한 인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수사 및 재판과정 상의 경험이 제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제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태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의 제도에 대한 인식이 더욱 부정적인 점을 인식하여 이러한 재범자들에게 어떻게 신상공개제도를 이해시키고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일 것인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정법률의 영향으로 성폭력 범죄자의 전과사실을 죄명과 횡수로 기재하도록 한 것은 재범자들에게는 부담일 뿐 아니라 제도에 대한 부정적 수용태도를 강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신상공개제도는 성범죄자에 대한 일반 시민의 알권리 보호 및 이로 인한 보호행동의 강화 뿐만 아니라 제도 대상자의 수용 및 재범억제 등의 효과를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제도 대상자들이 신상공개제도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 제도의 올바른 운용 및 제도의 의도치 않은 역기능을 막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의 신상공개제도 운영은 대상자의 자발적인 등록과 재등록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대상자가 등록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등록 시 해당 부처에서 발급하는 등록통지서에 기재된 서면 안내절차를 참고로 하여 대상자가 스스로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관련규정을 숙지하는 실정이다. 현재의 제도운영과정에서는 대상자가 신상공개제도 및 그 취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등록 및 공개제도 절차의 전반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것이다(김지선 외, 2013).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대상자가 신상공개명령을 받고 등록의무를 준수하는 단계에서 신상공개제도의 각 내용과 관련 규정은 물론 제도의 취지 및 의의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제도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제도를 수용하도록 하여, 신상공개제도가 대상자에게 반감이나 저항을 일으키지 않고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의 신상공개제도가 제도의 시행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한 실증연

구 결과의 반영이라기보다는 대중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아동 및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발생과 보다 더 강력한 정책을 요구하는 여론의 영향을 받은 결과임을 고려할 때, 제도 운영과정을 통해서라도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대상자들의 올바른 인식과 수용태도를 갖게 하도록 하는 장치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신상공개제도의 대상이 된 성범죄자들이 제도를 어떻게 인식하며 이러한 제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무엇인지를 살펴본 탐색적 연구이다. 그러나 연구를 위한 대상의 선정이 현실적 한계로 인해 신상공개제도 대상자 전체를 반영하지 못하고 보호관찰 중인 대상자만을 포함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신상공개 성범죄자를 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신상공개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신상공개제도의 시행역사가 비교적 짧아 현재 중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신상공개명령을 받은 많은 대상자들은 교도소에 복역 중이며 상대적으로 경한 성범죄를 저지른 신상공개제도 대상자만을 연구에 포함하였다는 한계 또한 있다.

대상자의 신상공개의 제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가설검증이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인해 탐색적 수준에 그친 점도 본 연구의 한계이다. 그러나, 본 연구가 대상자의 제도인식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신상공개 대상자들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연구가 수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김지선, 강지현, 김정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성폭력 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1):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영란, 2005.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경험적 연구, 사회 교육과학연구, 8(1), 63-88.
- 이영분 외. 2002. 신상공개제도 효과 측정 및 제도개선, 청소년보호위원회.
- 조윤오, 2010.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저항이론 관련요인 분석. 형사정책연구 82(2).
- Barnes, J. C., T. Dukes, R. Tewksbury and T. De Troye. 2009. Predicting the impact of a statewide residence restriction law on South Carolina sex offenders. *Criminal Justice Policy Review*, 20, 21-43.
- Datz, A.L. (2009). *Sex Offender Residency Restrictions and Other Sex Offender Management Strategies: The Probation Officer Perspective in Florida*. Tallahassee, FL: Bureau of Probation and Parole Field Services.
- Duwe, G., W. Donnay, and R. Tewksbury. 2008. Does residential proximity matter? A geographic analysis of sex offense recidivism.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5, 484-504.
- Finn, P. 1997. *Sex Offender Community Notification*. 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 Gaines, J.S. 2006. Law enforcement reactions to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community notification. *Police Practice and Research*, 7, 249-267.
- Kernsmith, P.D., E. Comartin, S.W. Craun, and R. M. Kernsmith.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sex offender registry utilization and awareness.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21, 181-193.
- Letourneau, E.J., D. Bandyopadhyay, K.S. Armstrong, and D. Sinha. 2010. Do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requirements deter juvenile sex

- crime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7, 553-569.
- Levenson, J.S., T.N. Brannon, T. Fortney, and J. N. Baker. 2007. Public perceptions about sex offenders and community protection policies. *Analyses of Social Issues and Public Policy*, 7, 1-25.
- Levenson, J.S. and L.P. Cotter. 2005. The effect of Megan's Law on sex offender reinteg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1, 49-66.
- Levenson, J. S., Fortney, T., & Baker, J. N. 2010. Views of sexual abuse professionals about sex offender notification policie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54, 150-168.
- Levenson, J. S., K. M. Zgoba and R. Tewksbury. 2007. Sex offender residence restrictions: Sensible crime policy or flawed logic? *Federal Probation*, 71 (3), 2-9.
- Lieb, R. and C. Nunlist. 2008. *Community Notification as Viewed by Washington's Citizens: A 10-year Follow-Up*. Olympia, WA: Washington Stat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 Logan, W. A. 2009. *Knowledge as Power: Criminal Registration and Community Notification Laws in America*.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Quinn, J. F., Forsyth, C. J., & Mullen-Quinn, C. (2004). Societal reaction to sex offenders: A review of the origins and results of the myths surrounding their crimes and treatment amenability. *Deviant Behavior*, 25, 215-232.
- Sample, L. L. and C. Kadleck. 2008. Sex offender laws: Legislators' accounts of the need for policy. *Criminal Justice Policy Review*, 19, 40-62.
- Sherman, L. W. (1993). Defiance, deterrence, and irrelevance: A theory of the criminal sanction.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 445-473.
- Socia, K. M. (2011). The policy implications of residence restrictions on sex offender housing in Upstate New York. *Criminology & Public Policy*, 10, 351-389.

- Tewksbury, R. 2004. Experiences and attitudes of registered female sex offenders. *Federal Probation*, 68, (3): 30-33.
- Tewksbury, R. 2004b. Collateral consequences of sex offender registration.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21(1), 67-82.
- Tewksbury, R. 2005. Collateral consequences of sex offender registration.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21, 67-82.
- Tewksbury, R. 2006. Sex offender registries as a tool for public safety: Views from registered offenders. *Western Criminology Review* 7 (1), 1-8.
- Tewksbury, R. and W. G. Jennings. 2010. Assessing the impact of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community notification on sex offending trajectorie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7, 570-582.
- Tewksbury, R. and M.B. Lees. 2007. Perceptions of punishment: How registered sex offenders view registries. *Crime & Delinquency*, 53, 380-407.
- Tewksbury, R. and E. E. Mustaine. 2007. Collateral consequences and community re-entry for registered sex offenders with child victims: Are the challenges even greater? *Journal of Offender Rehabilitation*, 46, 113-131.
- Zandbergen, P.A., J.S. Levenson and T.C. Hart. 2010. Residential Proximity to schools and daycares: An empirical analysis of sex offense recidivism.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7, 482-502.
- Zevitz, R. and M. A. Farkas. 2000. *Sex Offender Community Notification: Assessing the Impact in Wisconsin*. 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 Zgoba, K.M., B.M. Veysey and M. Dalessandro. 2010. An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community notification and registration: Do the best intentions predict the best practices? *Justice Quarterly*, 27, 667-691.

Sex offenders' negative perception on notification policy

Kang, Ji-Hyon

In Korea,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policy on sex offenders are among the mostly widely discussed and debated policies with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for sex offenders. Even though public's view and perception on the notification policy are described as valuable and important for public safety and the right to know for the public, there is lack of data regarding how sex offenders perceive and value this policy which they are subject to. Previous studies heavily focus on the constitutional concern on the violation of individual privacy and legal issues such as double jeopardy, cruel and unusual punishment, etc. Studies on the perceptions and views on notification policy mainly conducted towards the public, and previous studies rarely focus on the sex offenders' view and perception on the policy. The understanding of the policy and positive attitude toward those regulations are crucial for the success of the policy. The present study proposed to address this gap through an examination of the sex offenders' opinion on the notification policy and what factors contribute to the perception of public notification law among sex offenders subject to notification policy.

Data for the present study are collected from survey administered to convicted sex offenders who are on probation currently and subject to notification policy. Individuals who have prior history of sex crime are more likely to have negative perception on the community notification. In addition, individuals who had negative experiences during investigation and trial process are more likely to have negative perception on community notification. Unexpectedly however, negative experiences within neighborhood due to the notification such as threatening from

neighbors and moving out of neighborhood do not effect on one's negative perception on the community notification.

❖ Key words : sex offenders, community notification policy, sex offender notification policy.